

## 유초하 교수의 글(본지 95/5·6월호 게재)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

◇... 본지 제75호(95/5·6월호)에 게재된 특집 “한국 대학기구의 허와 실” 중 유초하 교수(충북대 철학과)가 집필한 “대학기구의 제자리 찾기: 개혁된 대학의 주체적 조건”(10~18쪽)의 글 내용에 대해 충북대학교직원협의회에서 3개항의 공개질의(6월 24일)를 해온 바, 이에 대한 유초하 교수의 답변(7월 1일) 내용을 전재한다. 양측의 진지한 의견 제시와 질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린다.

『대학교육』지는 대학 구성원 모두의 의견과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반론권을 보장함으로써 대학 발전을 위한 토론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편집자 ...◇

**질의 1:** “대학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교수와 학생에 비해 사무직원은 부차적 지위에 선다.”라는 표현은 너무 편협하고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대학은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자 맡은 바 자기의 고유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 교육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지 교수가 대학의 모든 분야에서 중심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가 아닙니까?

**답변 1:** “대학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교수와 학생에 비해 사무직원은 부차적 지위에 선다.”라는 표현은 문장 전체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교수와 학생에 비해 사무직원은

부차적 지위에 선다.”라는 부분만 떼어놓고 본다면 마치 사무직원은 개인적·사회적 권리와 의무의 모든 면에서 교수와 학생에 비해 하위의 신분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따라서 “너무 편협하고 주관적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의 존재이유에 비추어’라는 구절과 함께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따로 떼어놓고서는 전체 문장의 의미를 온당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대학의 존재의의는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는데 있다는 것과 대학의 사회적 임무가 연구와 교수 및 사회봉사로 이루어진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의 이러한 임무는 일차적으로 교수집단에 의해 수

\* 유초하 교수의 답변 내용 중 밑줄 부분은 필자가 특별히 강조한 것임.

행됩니다. 학생의 편에서 보면 강의 등의 지도를 받아 전공과 교양의 지식을 습득하고 육체적·정서적 능력과 소양을 함양하여 미래의 역군으로 성장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이 임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대학이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서는 사무직원의 일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학이 사회적 임무를 달성한다는 것은 교수, 학생, 사무직원이 각자의 몫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 세 집단의 임무를 놓고 볼 때 교수는 대학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연구와 교수의 업무에 종사하고, 학생은 대학의 목적에 따라 미래의 역군으로 기능하기 위해 학습하는 일을 과제로 부여받으며, 직원은 학생과 교수의 일을 지원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다른 교수(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대학 행정직원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간접적인 지원활동이다. 즉, 교육·연구·사회봉사로 요약되는 대학의 기본적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대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활동인 것이다. 실제로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교수들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직접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데 비해 행정직원들은 대체로 교수들의 활동을 보조 내지 지원하는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대학교육』, 58호)

교수와 직원의 이러한 직접적·간접적 임무 내지 역할은 각각 ‘기능적 임무’와 ‘지원적 임무’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귀 협의회는 질의에서 문제가 된 문장은 이런 맥락에서 직원들의 역할과 교수들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문제로 상정된 본인의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그에 이어지는 문장들을 함께 놓고 볼 때 더욱 잘 드러납니다.

“대학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교수와 학생에 비해 사무직원은 부차적 지위에 선다. 이는 직원이 교수나 학생보다 인격적으로나 신분상 하위에 놓인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非敎職 사무직원뿐 아니라 半교직 직원인 조교나 노무직 직원인 청소부나 경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수나 학장보다 성숙하고 선량한 청소부·경비원이나 타자수를 우리는 적지않게 볼 수 있다. 다만, 대학 운영의 공적 역할에 있어 교수와 학습이라는 대학 기능의 주된 분야와 그에 대한 보조·지원 부서는 같을 수 없다.”

대학의 존재이유 내지 존재의의에 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포함하여 본인의 글 첫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첨부한 본인의 글을 통해 그 문단의 글을 위 인용문과 관련시켜 전체 의미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자 맡은 바 자기의 고유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 교육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귀 협의회 의견에 본인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교수가 대학의 모든 부분에서 중심이다.”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또한, 귀 협의회가 문제로 삼은 본인의 글 어디에도 그러한 표현은 없습니다. 이 점에 관련된 본인의 글은 아래와 같은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교수, 학생, 사무직원으로 구성된다. 대학이라는 사회는 이들 세 주체가 수행하는 역할들의 통합으로 운영되는 자율적 사회이다. 대학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로 볼 때 그 정체성은 이들 주체의 공동적 형성물이다. 그러나 이들 주체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교수이다. 앞서 말한 대학의 학내정치에서 교수, 학생, 직원의 세 주체 가운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교수이다.”

본인으로서의 위의 글에서 교수뿐 아니라 학생과 직원이 대학을 구성하는 공동주체이자 각각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전제로, 현재의 현실에서 대학의 공동의사를 형성하는 데 있어 교수집단이 선차적·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위의 문단에 나타난 교수 역할의 중심성에 대해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한다면, 교수의 일원인 본인으로서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수집단이 다른 직업집단 또는 사회계층과는 달리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고나 태도를 가졌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교수는 전문적 식견을 지닌 대표적 지식인집단으로서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다는 것, 그리고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소속된 학교나 교육계 일반의 민주적·자율적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는 교수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직원은 대학행정 내지 학사업무 처리에 결정권을 가지는 기관이 아니다.”, “사무국장 또는 총장이 지시하는 대로 실무를 처리하는 하수인적 지위를 지닌다.”라는 표현은 국가공무원법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학사행정을 처리하는 공무원(사무직원)의 고유업무를, 하수인이라는 용어 운운하여 표현한 것은 너무나 편협하고 옹졸한 의식에 사로잡혀 전국 대학직원의 명예를 무참히 훼손시키는 자의적 표현은 아닙니까?

현대의 시대적 조류인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대학 발전을 위하여서는 3주체(교수, 학생, 직원)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개혁과 화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오히려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망발은 대학 구성원간의 갈등을 초래하려는 처사로 양식 있는 대학인들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 2:** 국립대학의 직원들이 국가공무원법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실무를 처리하는 공무

원임은 당연히 사실입니다. 본인의 글에 담긴 표현이 ‘전국 대학직원의 명예를 무참히 훼손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면 본인으로서도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본인의 글이 충북대 직원 여러분이 분노할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다만, 본인으로서 글에 포함된 단어들을 귀 협의회가 해석하는 바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해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본인의 글을 다시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인용되는 부분은 바로 앞에 인용된 글에 이어져서 동일한 문단에 속하는 문장들입니다.

“직원은 대학행정 내지 학사업무의 처리에서 결정권을 가지는 기관이 아니다. 사무국[처]장 또는 총장이 지시하는 대로 실무를 처리하는 하수인적 지위를 지닌다. 교육과 관련하여 사무직원은 받는 쪽이라기보다는 주는 쪽에 속하되,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일을 돕는 지위를 갖는다. 대학에서 사무직원이 학생에게 주는 교육적인 도움은 교수의 임무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간접적 기여이다. 대학생에 대해서 사무직원은 행정처리의 측면에서 보조하고 지도하지만, 교육의 맥락에서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것이 아니다.”

귀 협의회에서 문제의 초점으로 삼고 있는 ‘하수인’(下手人)이라는 말은 복합어입니다. 위의 글에 있는 ‘하수인적 지위’라는 말에서 ‘하수’(下手)란 ‘착수’(着手)와 같은 말로서 ‘어떤 일에 직접 손대는 것’을 뜻하며, ‘하수인’(下手人)이란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남의 밑에서 그 지시에 따라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말큰사전』 해당항목을 찾아보면 쉽게 확인됩니다. 『우리말큰사전』은 우리말을 살리고 가꾸는 일에 신명을 바치신 선구적 연구자들이 1908년 이래 쌓아온 업적을 계승하여 「한글학회」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공동노력을 통해 1991년에 발간한 가장

대표적인 사전입니다.

위의 글에서 ‘하수인’이란 ‘지시인’ 내지 ‘명령자’에 대비되는 말로서 일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수인’이 ‘손을 대어 직접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은 그 지칭 대상이 살인범이라는 점이 글의 맥락과 분위기에서 전제되었을 때에만, 즉 하수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결정권자가 살인의 의도와 목적을 지녔을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위의 글이 대학의 직원을 ‘손을 대어 직접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그것은 곧 대학의 총장이나 사무국[처]장을 ‘사람을 죽이도록 지시하거나 명령한 사람’으로 전제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 글의 맥락과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간취할 것입니다. 더욱이 사전에서 풀이한 ‘하수’의 말 뜻 가운데 ‘착수’, 즉 ‘직접 손을 대어 일함’은 ‘사람을 직접 죽임’보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으로서의 글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말큰사전』에 있는 뜻풀이를 참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수인’이라는 말이 ‘스스로 결정권을 갖지 않고 지시나 명령에 따라 직접 실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은 우리말과 漢字에 대한 지식 및 漢學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下手’는 漢字語로 볼 때, ‘着手’나 ‘措手’와 통하는 말로서 가장 원천적으로는 ‘손을 대다’ 내지 ‘적절히 처리하다’는 뜻을 지닙니다. 이 점 또한 漢字辭典이나 漢語辭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글이 의미하는 바, “직원은 결정권을 갖지 않는 실무자이다.”라는 것은 직원들의 직무나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직원이 교수나 학생보다 인격적으로나 신분상 하위에 놓인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밝혔습니다. 다만, 학문의 연구와 전수 및 학생의 인간적 성장이라는 대학 운영의

내부적 목표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은 업무수행의 공적 관계에서 기능상 교수에 비해 비당사적 입장 내지 부차적 위치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협의회가 배포한 문건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무직원이 업무수행의 공적 관계에서 상관의 지시에 따른다는 판단은 법규정에 대한 지식 이전에 약간의 사회경험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종의 상식으로 알려진 사실일 것입니다.

사무직원이 일정한 명령계통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비해 교수는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자율적 결정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헌법과 각종 법률을 통해 여러 가지 특수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수들이 예외없이 인격이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있을 수 없고, 어떤 직업계층이나 사회집단도 총체적 인간으로서 남보다 우월하다고 보장되거나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이 지닌 ‘國家百年之大計’로서의 성격, 대학이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존중, 교권에의 존중과 교원의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배제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91년에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일반 행정사무직과 달리 교원일반, 특히 교수에게 부여된 제반 특권들에 대해서는 『대학교육』 75호 12쪽 왼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통해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교수가 특권층이라거나 특권층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서의 핵심은 교수는 “일련의 학문적·교육적 행위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지닌다.”는 것, 그리고 이런 점에서 “교수는 개개인이 하나의 기관이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처음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양해되는 '사실'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대학교육』 58호에 실린 국민대 행정대학원장 이가중 교수의 글 “대학행정의 성격”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기술들은 대학의 입무수행에서 교수와 사무직원이 각자의 공적인 업무수행에서 처한 법적 지위 내지 각자가 직무수행상 고유하게 지닌 관계의 점에서 나타나는 상이성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본인은 교수를 포함한 교원들이 보장받고 있는 이러한 특권들이 결코 개인의 안일과 이익을 위해 부여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원들에 비해 적어도 상대적으로 더욱 고달프고 힘겨운 업무에 시달리는 일반직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경제적 여유와 문화적 향유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게 되기를 희구해왔고, 또 그 소망의 실현을 향해 미력하나마 보태고자 나름대로는 노력해왔습니다. 본인의 그러한 노력은 충북대의 발전과 대학의 자율화를 향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현재의 이남호 총장을 비롯하여 본인이 충북대에 취임한 이후의 역대총장들, 그리고 상당수의 충북대 사무직원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본인이 “너무나 편협하고 응졸한 의식에 사로잡혔다.”고 평가되고 “양식있는 대학인들을 슬프게 만들었다.”고 비난받게 되니 진실이 전달되지 않은 현실과 전달하지 못한 자신의 능력에 슬프고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현대의 시대적 조류인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대학발전을 위하여 교수, 학생, 직원의 3주체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개혁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귀 협의회 의견에 본인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학 운영에 종사하거나 개입하는 여러 집단 중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주체는 현재의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당사자 집단입니다. 이는 강력히 주장하지 않더

라도 누구나 긍정하는 사실이자 당위에 속합니다. 앞의 인용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학의 정체성은 이들 세 주체집단이 공동으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본인의 글에서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담은 문장이나 문단은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 옮기는 것들은 그 중 대표적인 예에 속합니다.

“대학이 이런 多重的 난관을 극복하고 역사적·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문제를 찾아내고 그 해결을 위한 실천에 동참해야 한다.”

“대학의 자주성은 학교법인 곧 재단을 주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생·직원으로 이루어진 대학공동체를 주제로 하고 권력과 금력을 대상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즉, 재단은 대학의 자주성에 대해 그 주체가 아니라 객체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총장을 포함한 대학의 일차적 구성주체들 위에 군림하는 주인의 위치에 서도록 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은 근본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과 자주성의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담지자이자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할 책임의 담지자는 대학법인 또는 그 실질내용인 재단(이사장)이 아니라 교수, 학생, 직원과 총장으로 구성된 대학사회의 공동주체라는 점을 정부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학의 세 주체 가운데 교수가 학내정치의 중심이라는 것은 학생과 직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은 사무직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가진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은 물론 대학사회를 구성하는 주체성원으로서 대학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한 개인적·집단적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로 반영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직원은 직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자유와 권리, 직무수행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한 제도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건의할 권리, 자신들의 이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능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할 권리, 나아가 총장선출을 비롯한 대학 운영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의 결정에 적절한 수준에서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렇듯 대학의 구성주체로서 직원들이 확보하고 향유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의도에서 쓰여진 글이 그 의도와는 반대로 “대학구성원간의 갈등을 초래하려는 처사”로 해석되고 “오히려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망발”로 비쳐진 데에 대해 본인은 충북대 동료로서 직원 여러분과 함께 비애를 느낍니다.

질의 3: “교육부의 내부를 들여다 보면 부패한 교육관료들이 득시글거리고 있다.”라는 표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3: “교육부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부패한 교육관료들이 득시글거리고 있다.”는 표현은 대한민국 교육관계 공무원 전체를 두고 서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로 이사관급 이상의 교육관료집단 중 지연과 학연의 점에서 특수한 연고로 묶인 편파적 집단을 지칭합니다. 이들의 존재양태와 역할에 대해서는 김병욱, “한국의 교육관료”, 『신동아』 92년 2월호; 김신일,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1993년; 김진은, “한국교육조직의 관료적 권위주의” 등의 논문과 저서, 그리고 80년대 이후 신재철, 고희일 등 연구자들의 연구업적 등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백 명 안팎에 이르는 그들 기득권 집단은 관료적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교육개혁의 걸림돌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장관이나 대통령의 교육개혁의지에 대해서조차 실질적 태업과 같은 교묘한 방식으로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들에 대한 일대 정리아말로 당면한 교육개혁의 제일차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 본인의 글에

서 주장하는 핵심은 학문과 교육의 민주적·자율적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는 부패한 관료들과 함께 비리를 자행하는 사립대학 법인이사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척결의 일차적 임무는 물론 정부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대학의 구성주체에게도 일정한 몫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봅니다. 즉, 우리 모두가 방관하고 있는 한, 부패와 비리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결코 청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부패관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교육공무원들은 법규와 지시를 준수하며 성실히 복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무관 이하의 공무원들은 정책결정에 참여하거나 개입할 통로가 매우 좁은 상태에서 격무와 상대적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학원의 자율성이 더욱 공고히 확보되기를 기대하며 학문과 교육의 발전에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바야흐로 도약의 새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충북대의 사무직원들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 타 국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본인의 글에 담긴 취지와 의도에 대한 곡해를 푸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누구든 냉정하게 본인의 글을 읽고 나면, 답변을 통해 헤명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글은 대학을 구성하는 삼대 주체집단의 하나로서 사무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보다는 총장선출에의 참여를 비롯하여 직원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글이 “전국 대학행정직원의 명예를 무참하게 훼손시키는 망발”이라는 것은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곡해라고 봅니다. 다만, 본인의 글 중 몇 개의 문장을 따로 떼어내어 독립된 글로 볼 경우에는 몇 가지 점에서 곡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글이나 말에도 그러한 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말이나 글이 다루는 주제가 복잡하거나 방법이 정밀할수록 그 글이나 말의 일정 부분을 분리했을 때 원래의 취지와 멀어지거나 심지어 반대의 논지를 지닌 것으로 해석될 여지와 가능성은 넓어지고 높아 집니다.

본인이 글을 통해 의도하고 지향했던 선의와는 무관히 그 글이 충북대 직원 여러분이 분노할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 본인은 여러 가지로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곡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말과 글에 대한 성찰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반성

과 성찰의 연장에서, 본인의 글이 충북대 직원 여러분에게 본지와 다른 방향의 곡해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그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끝으로, 충북대학교의 자율적 발전을 위해 직원 여러분이 쏟는 노고에 대해 지원업무를 빛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감사드리며, 충북대학교직원협의회가 전국국립대학직원협의회 및 전국사립대학의 직원노조들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충북대를 비롯한 전국 대학의 사무직원들이 향유할 복지와 권리를 더욱 증진시키고, 아울러 대학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 大學教育

좋은 독자는  
좋은 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할 줄 수  
있는 주제 논의,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비론 등

###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우)150-7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자료부  
『대학교육』 편집실  
(전화 : 780-7942, 783-3891,  
팩스 : 780-8311)

### ■ 해당 칼럼 및 분량

- 논단 (200자 원고지 50장 안팎)
- 교수담론 (25장 안팎의 수상)
- 나의 수업  
(30장 안팎의 수업관 및 수업방법 소개)
- 대학은 지금  
(30장 안팎의 대학 관리운영 혁신사례 등)

### ■ 참고사항

- 원고는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제출된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  
습니다.
- 필요한 경우, 편집자문위원회는 집필자  
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  
정·보완할 수 있습니다.